

전북도·충남도, 상생발전 '맞손'

문화·관광·농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 등 지속 가능 공존공영 5개 과제 추진

전북도와 충남도가 양 지방정부의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위한 5개 과제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전북도와 충남도는 1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태홍 충남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갖고 '백제역사 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 순례 연계 계획'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전북도와 충남도가 지난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상호보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는 문화·관광·농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상호간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자원과 정보,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며 양 기관 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지방정부가 채택한 '상생발전 합의문' 주요 내용은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 순례 연계화 △관광지원의 연계 상호홍보 및 지역 △초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탄소중립 실천 수호 및 에너지 산업 육성 공동 협력 △초광역 인프라 확충협력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양 지사는 상호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합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실현하며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고, 국내의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고 있는 충남도와의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매우 뜻깊다"며, "내년 1월 18일 강화된 자치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

는데도 큰 미중물 역할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홍 충남지사는 "60여년 전 전북은 피붙이였던 금산군을 시집보내었고, 서천과 군산지역 주민들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식을 기점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돈으로서, 우리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전북도와 충남도가 힘을 모아 동반성장하고,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북도와 충남도는 특별한 동행을 이어가며, 무엇보다 큰 틀에서 협력이 이뤄진 만큼 지역의 현안 사항과 중·장기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간 긴밀한 소통과정을 통해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양 도가 동반 성장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이명연·윤영숙 도의원 새만금 예산 복원 릴레이 단식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과 윤영숙 의원(익산8)이 16일부터 서울 간 도의회 청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투쟁은 미미한 몸짓으로 끝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한다"며 "전북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전북인의 간절함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영숙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폭력에 지방의회가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나서야 했다"며 "34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이번만큼은 정상 궤도에 올라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날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7명의 도의원이 42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재훈 기자



수도권 내 출향단체와 간담회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쟁점별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조지훈 사무총장 등은 16일, 서울에서 수도권 내 전북도 출향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형 구급차 모델 개발·도입을"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연합회의에서 촉구 "119구급차 95% 이상이 소형구급차... 응급조치 공간 부족"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2)은 16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의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한국형 구급차 모델 개발 및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나라 119 구급차의 95% 이상이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소형구급차로, 차량 앞뒤 길이가 짧아 환자의 머리맡으로 공간이 나오지 않고 내부가 비좁아서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 등 차량 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형구급차보다 내부 공간이 넓은 중형구급차가 전국에 74대 정도 보급되어 있지만 15인승 밴을 개조하다보니 차폭이 넓어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를 운행하기가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진다"며 "119구급차량이 진정한 '달리는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로 조건을 가진 일본의 경우처럼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2)은 16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의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한국형 구급차 모델 개발 및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나라 119 구급차의 95% 이상이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소형구급차로, 차량 앞뒤 길이가 짧아 환자의 머리맡으로 공간이 나오지 않고 내부가 비좁아서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 등 차량 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형구급차보다 내부 공간이 넓은 중형구급차가 전국에 74대 정도 보급되어 있지만 15인승 밴을 개조하다보니 차폭이 넓어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를 운행하기가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진다"며 "119구급차량이 진정한 '달리는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로 조건을 가진 일본의 경우처럼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1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태홍 충남지사가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도, 기재부에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건의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 사업 정상 추진 필요성 피력

새만금 사업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중앙·지역 정가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는 중앙부처를 찾아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당위성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실적을 이어갔다.

정차권에서는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원상회복 필요성을 건의하는 가운데, 전북도에서는 16일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 필요성과 예산 원상회복을 설득했다.

이날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을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대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기업 투자유치 실적도 증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시에도 계속사업은 계획에 따

라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었다며,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등 진척도가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규 부지사는,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신속한 새만금 개발 지원을 밝혀왔던 대통령과 총리의 발원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결과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 크게 반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하며, 지난 34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개발을 행정부가 제대로 진행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공정위, 외국인 동일인 지정 방안 해법 못찾아"

민주 김성주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지정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방안'을 두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 총수의 동일인 지정 방안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외국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건을 두고 진행한 협의는 올해 3



월, 5월, 7월 세 차례에 불과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교부 측에서 연초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우선으로 문의한 것 외에는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도 소요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처럼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더딘 경우, 올해의 제도개선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것이 김성주 의원의 지적이다.

외국인 총수의 동일인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를 두고 시대에 뒤

떨어진 제도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동일인 제도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에 역할하고 있으며, 국적과 상관없이 형평성 차원에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처음으로 동일인,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 등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CI그룹의 동일인 이우현 회장을 비롯한 39명의 총수일가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특정인 누군가만 제도 사각지대를 이용해 혜택을 보는 것은 형평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하며, "쿠팡의 경우 현재 김범석 의장 일가에 의한 사익편취 규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제도개선이 미뤄지는 사이 김범석 의장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규제 방법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하림그룹 식품철학

자연이 주는 감동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여 가장 맛있는 식품을 만드는 하림 그룹의 식품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인공적인 부재료(보존제·화학조미료 등)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Fresh food with no artificial ingredients)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식품이 주는 신선함의 맛, 순수함의 맛, 완전함의 맛, 본질의 맛, 균형의 맛, 건강함의 맛에서 느끼는 자연의 감동을 담았습니다.